

건설 원·하도급 상생 협력 및 동반 성장의 3가지 조건

김 관 보 |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오 늘날의 최대 화두는 대·중소 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추구이다. 국가 발전의 핵심 동인인 건설산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건설산업 관련 정책 집행 기관인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와 함께 민간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공정거래 질서 유지의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7년 9월에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간의 삼각 공조 프로그램(TCPT : Triangle Cooperation Program)인 「대·중소 기업간 상생 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운용하여 왔다.

최근 동반 성장의 큰 틀을 포함하기 위해 지난 4월 그 명칭을 「대·중소 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동반성장협약)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동반성장 문화가 건설 하도급 현장에 지속적으

로 조성되기 위한 3가지 성공 조건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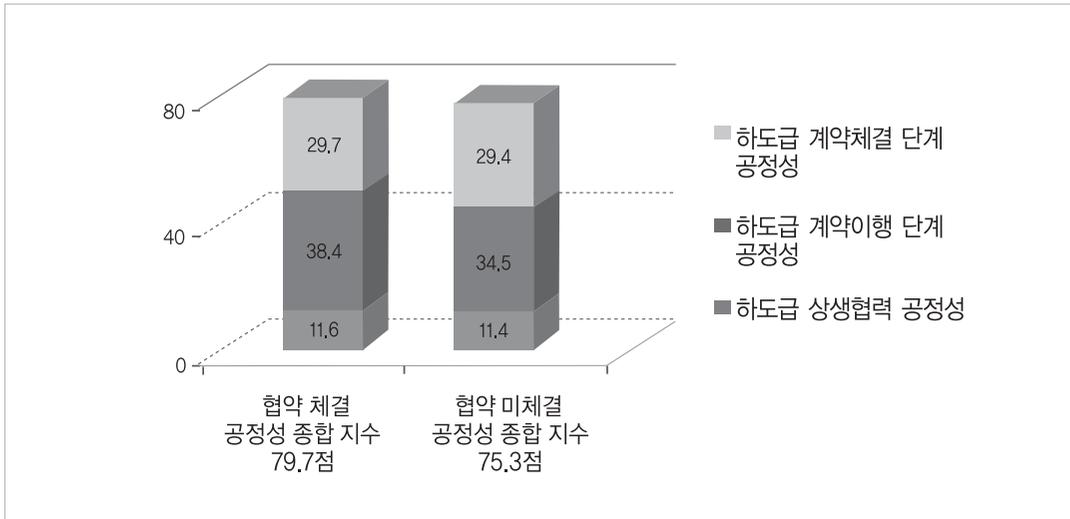
대·중견 일반업체의 적극 참여

건설 하도급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제고이다. 시행 3년의 동반성장협약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어느 정도 높이고 있다.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생 협력 방안의 하나인 자율적인 기재 장치이다. 협약 체결 업체들에게 협약 이행 결과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만 부여되며 제재 조항은 없다. 따라서 원사업자인 대·중견 일반건설업체들은 미래 가치를 존중하는 반복적인 게임 상황인 동반성장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 연구(김관보 외, 2010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 제조업, 용역서비스업 3개 업종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000개 업체(협약 체결 500개, 미체결 업체 500개)에 대한 공정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수급 사업자 중 동반성장협약을 체결(79.7점)한 업체는 미체결(75.3점) 업체에 비해 공정성 점

특집 건설 하도급은 지금...

동반성장협약별 공정성 종합 지수



을 살펴보면, '하도급 계약이행단계 공정성'이 협약 체결 38.4점/협약 미체결 34.5점으로 가장 큰 공정성 점수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단계 공정성'이 협약 체결 29.7점/협약 미체결 29.4점으로 나타났고, '하도급 상생협력 공정성'은 협약체결 11.6점/협약 미체결 11.4점인 것으로 나타나 점수 비중이 가장 낮았다.

또한, 업종별 동반성장협약 유무에 따라 공정성 점수를 분석한 결과 건설·제조·용역 모든 업종에서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동반성장협약 미체결 업체에 비해 공정성 점수가 높았다. 상생 협약을 체결한 3개 업종 업체들이 각각 제조·수리업 4.4점, 건설업 4.0점, 용역서비스업종 12.3점씩 상생 협약 미체결 업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생력 평가

동반성장협약의 중요성과 함께 대·중소 기업 동반 성장의 달레마로 하도급 분야에서 일방적인 지원

할 수 있다. 최근 대·중소 기업간 하도급 거래의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의 현안으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 확대, 기술 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중소 수급 사업자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동반성장협약을 통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방지와 수급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기술 지원, 교육 훈련 등의 일방적 지원과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과연 지원의 효과가 하도급 기업에 내재화되어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 동반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수급 사업자에 대한 자생력 평가가 대기업의 하도급 거래 공정성 및 상생 협약 실천성 평가 못지않게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에도 수급 사업자들이 원사업자로부터 지원받는 금융 지원, 기술 지원, 교육 훈련 지원 등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 지표를 다자언해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협약에 대한 대기업의 실적 평가와 함께 이러한 중소

하도급 기업들에 대한 자생력 평가를 겸비한 동반 평가는 결과적으로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대·중소 기업간의 동반 성장과 함께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리라 판단된다.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유인 구조 규칙 설계 및 집행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하도급 거래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순환적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확대, 부당 감액 입증 책임 전환 및 감액 사유 서면교부 의무화, 기술 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화, 효과적인 납품 단가 조정 체계 구축, 기술 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칙들을 설계하였다. 특히, 동반 성장을 위한 협약 이행 내용에 다양한 선진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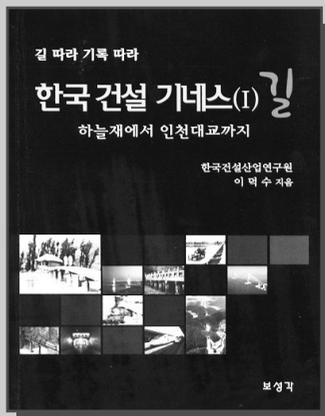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칙들이 구

성원인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 나가는 것이다. 개정된 법 자체가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거래 당사자들의 유인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장 밀착 실태에 근거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 설계가 필요하다. 법 집행도 건설업종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건설산업 환경 변화에 걸맞게 신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동반 성장 추진 대책에 따라 2차 협력사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에서 건설 분야 자재·장비 업체의 보호 문제에 대한 목소리도 원사업자의 유인 구조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건설 원·하도급 상생 협력 및 동반 성장의 성공적인 3가지 조건은 일반건설업체 - 전문건설업체·업종별협회 - 정부의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쌍방향 소통에 달려 있다. CERIK

도 · 서 · 안 · 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 / 이덕수 지음, 보성각 펴냄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현대의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를 새롭게 조명한 책이 나와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덕수 연구위원은 최근 기록상 보이는 최초의 도로인 계립령(하늘재)을 비롯해 수포교, 신작로를 거쳐 인천대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통시설 SOC 분야에서 '최초, 최고, 최장, 최대' 등의 가치를 지닌 구조물들을 시대순으로 묶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을 발간하였다.